

이덕일의 '역사의 창'



역사왜곡방지법이 불편한 사람들

지난 5월 13일 김용민 의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연히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지배 또는 그 치하의 폭력·학살·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한때 역사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예상처럼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고고학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등 역사 관련 21개 학회 등이 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망언하거나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돈을 받는 하버드대 램피어가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망언했을 때도 침묵을 지키던 학자들이 일제 식민통치 찬양 방지법에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점기는 빼앗긴 강토를 되찾기 위한 영토 전쟁 시기이자 역사관을 다룬 역사 전쟁 시기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암 박은식,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단재 신채호 선생 등은 모두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영토 전쟁은 대략 끝났지만 역사 전쟁은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 나라의 수많은 대학 중 박은식·이상룡·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역사학과는 한 곳

도 없다. 반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인 상전(上典)들의 사랑을 받으며 민족사를 난도질했던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병도, 신석호의 역사관은 이 나라 모든 대학 사학과를 지배하고 있다.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역사가의 유향'이라는 책이 있다. '두계 이병도 선생 추념 문집'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나라 우수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를 향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낫 거둔 찬사들을 늘어놓았다.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는 식민사학자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광장', 1982. 4)라고 극찬했다.

'고려사' '지리지'나 '태종·세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등은 고려·조선의 북방 강역을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 선천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 후기 미수 허목도 '변새'에서 "공험진은...두만강 이북 700리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병도가 존경한다는 이케우치 등은 반도사관에 입각해 공험진을 1700여 리 남쪽의 함경남도 함흥 일대라고 끌어내렸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물론 현재 사용하는 검정교과서는 모두 이 식민사학자의 설을 추종 중이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아니라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편

찬한 교과서라면 명실이 상부하다. 역사왜곡방지법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사편찬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때 이처럼 친일반민족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국사편찬위원회에 3명의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법의 정신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것이지 아직도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해방 후 친일사학자들은 '식민사학'이란 이름표를 '실증사학'으로 바꿔 달고 서론에서는 '식민사학을 극복했다'고 자찬하고 본문에서는 식민사학을 되풀이하는 이중적 행태로 사회를 속여 오다가 '역사왜곡방지법'이 발의되자 '독일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 적폐 청산을 외쳤던 촛불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역사 적폐 세력들과 한 몸이 되어 역사를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어느 정도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법안이 나왔다. 얼마 전 홍익인간 정신을 지우려던 교육기본법을 발의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더니 다행이다. 우리 사회 좌우 곳곳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친일 카르텔이 각종 방해에 나서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역사 적폐 청산에 정권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걸려 있음을 인식하고 입회할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크라운을 왜 한 번에 붙이지 않나요



이경제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기간에 걸쳐 임시로 사용하게 한다. 환자분들이 '왜 한 번에 크라운을 장착하지 않고 임시로 사용하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한 번에 붙여 주세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크라운의 임시 합착'에 대해 알아보자.

보철물을 임시 접착하는 이유는 이 보철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미리 평가해 보기 위함이다. 성공적인 치과 보철물은 상실된 구멍 및 치아 조직을 완벽하게 재현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치아의 고유한 기능인 음식물의 저작, 발음, 심미성을 잘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음식물의 끼임, 교합의 이상, 시립 등의 불편감도 없어야 한다. 또한 보철물을 양치질을 통해 청소가 잘 되는지, 사용 시 파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등 치과 보철물의 유지 관리나 수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한다. 이같이 보철물이 치아의 기능성, 편안함,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바로 이 임시 합착 과정에서 이뤄지게 된다.

임시 합착을 위해서는 특수한 임시 합착용 시멘트를 사용되는데, 이 시멘트는 영구 합착 시멘트에 비해 부드러운 특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보철물을 임시 합착한 후 보철물의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만일 임시 합착 과정에서 보철물이 탈락된다면 치과의사는 탈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보

철물을 영구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보철물의 임시 합착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너무 점성이 강한 음식의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임시 합착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부드럽기 때문에 옛이 나 떡과 같은 너무 찰진 음식을 먹을 경우 임시 합착한 보철물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혹은 보철물의 탈락이 있는 경우 즉시 치과에서 재부착해야 한다.

임시 합착 과정은 약 1~2주 동안 시행하게 되는데 보철물의 종류나 크기, 부위에 따라 조금 더 오랫동안 부착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이 임시 합착 과정을 거친 후에는 반드시 영구 합착을 시행해야 한다. 영구 합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거나 귀찮아서 임시 합착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보철물 내부의 임시 시멘트가 녹아 보철물의 내면에서 충치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영구적인 시멘트로 최종 합착을 해야 한다.

치과병원이나 의원들이 크라운을 제작하여 바로 영구 합착하지 않고 임시 합착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크라운이나 브릿지 등의 치과 보철물은 상실된 치아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과 치료이므로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완전히 재현시켜 주어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합병증이 없어야 한다. 임시 합착은 성공적인 치과 보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기고

움직이는 나무



김경란
아동문학가·고려중학교 교사

지?' 잠시 머리돌정하며 질문한 학생을 보니 얼굴 표정이 거의 빨갛다 못해 노랗게 보일 정도였다. 알고 보니 친구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내일이 바로 시험 날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의 다짐'이 떠올랐다. "아, 언제라도 모르면 물어볼 수 있지요. 시험 범위는 47페이지까지입니다." 내 말에 교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한 학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덕 선생님 진짜 착하시다." 교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그래, 어쩔 났다는 것 보다 중요한 건 시들지 않게 하는 건지도...' 그날따라 교정의 나무들이 나를 보고 응원이라도 하는 듯 햇살 아래 더 반짝였다.

나무를 보면 웃지만 가지도 모두 똑같지는 않다. 그걸 좀 더 모양새 있게 정리해 주는 것은 정원사의 마음이다.

하지만 사람은 나무처럼 일정한 크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어디로 될지 모른다. 좋은 쪽으로든, 혹은 안 좋은 쪽으로든, 그래서 어렵다. 순간순간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옮겨야 할 때가 많은 것이다.

작년 이맘때의 일이다. 학교에 오면 옆드려 잠자거나 옆 친구에게 말을 걸고 수업을 방해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 "준성아, 자세 바르게 하자."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막무가내였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교사라도 나도 사람인지

라 인내에 한계가 느껴졌다.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혼내고 야단을 쳐야 하나 계속 부드럽게 대해야 하나. 어쩔 땐 그 아이가 미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가려는데 마이크 본체가 안 보였다. 수업 시간은 시작되고 순간 당황한 나는 '어느 반 교실에 두고 왔더라...' 생각하며 복도에서 잠시 헤매고 있었는데 3층 끝에서 누군가 나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준성이었다. 나는 그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화들짝 놀라며 준성에게 갔다. 준성이 손에 동그란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함참 찾았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다가가 외락 안아주고 싶었다. 작은 감동이었지만 그 후 나와 준성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다리라도 이어진 듯 조금씩 가까워졌다. 물론 준성의 수업 태도는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니 아이도 달라보였던 것이다.

정원이 아닌 교무실 뒤편 산에서 자란 나무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 조금 웃자라면 어떤가, 조금 뼈저 나가면 또 어떤가. 어떻게라도 나무는 자란다. 하물며 움직이는 사람 나무임에랴. 단점도 사랑으로 감싸 줄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명 한 명 빛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인내는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社說

정부 수해 대책 지지부진 지자체는 뒷집만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전남에서는 북구비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원인 조사와 주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섬진강 물난리' 직후 많은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수해 지역을 찾아 한목소리로 빠른 복구와 원인 규명 등을 다짐했다. 특히 조명래 당시 환경부장관은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지난 2005년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통폐합된 섬진강홍수통제소를 최우선으로 복원, 홍수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태껏 복원 여부는 물론 그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홍수 통제 담당 직원도 네 명으로 당시와 변화가 없다. 환경부는 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섬진강

유역환경정 신실 요구에 '적극 검토'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수해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도 지지부진하다. 물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주민 대표 참여 등을 놓고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다 지난해 12월에야 조사협의회를 구성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수해 원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해 수습이 지연되면서 임시 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피해 배상이나 보상도 서둘러야 한다. 전남도 역시 정부 부처의 처분만 기다리며 뒷집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지역 민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전달해 조기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섬 주민들 단돈 1000원으로 여객선 탄다

전남 지역에는 우리나라 총 3348개의 섬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이 있다. 이 가운데 유인도가 276개(13%), 무인도가 1889개(87%)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는 등 지역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9년 8월 '제1회 섬의 날'을 제정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다. '자봉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고흥 연흥도를 비롯해 영화 '서편제'로 널리 알려진 '느림의 섬' 완도 청산도, '순례자의 섬'이 된 기점·소악도 등 독특한 색깔을 가진 도내 섬들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과거에 섬이 소외되고 고립의 상징이었다면 요즘은 섬과 힐링을 안겨 주는 여행 대상으로 바뀌었다.

섬 주민들에게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주민들은 약 천후로 배가 뜨지 못할 경우 급한 응무가

있어도 꼼짝없이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객선은 물 나들이와 수산물 이송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다.

다만 육지 왕래가 빈번할수록 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남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내 1320개 여객선 운항 구간 가운데 섬 주민 이용이 많고 운임이 8340원 미만이던 93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산 발권 시스템이 갖춰지는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비 23억 원이 투입되는 '1000원 요금제'가 도입되면 섬 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섬이 많은 전남이기에 참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하겠다.

이제 섬 주민들은 1000원 여객선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물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도내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섬 관련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함바(飡鉢)라는 단어가 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간이식당을 뜻하는 일본말이다. 일제는 과거 한반도를 집어삼킨 뒤 일본 기업과 일본인에게 이권을 주기 위해 곳곳에 대규모 공사판을 벌였다. 그리고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식사를 위해 함바를 지어 운영했다.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지만 함바라는 말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함바를 운영하는 것은 일정 기간 짝퉁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뒷돈 거래가 당연시됐다. 함바 비리는 가장 추잡한 비리라고들

함바와 재개발

'함바왕' 이상봉(75) 씨가 과거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과 이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최근 공수처에 고소(진정)했다고 한다. 유 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인물이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이 유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 전 청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현금인출기로 무려 1만1878차

레에 걸쳐 209억930여만 원을 인출해 경찰 고위 간부, 고위 공무원, 공기업 건설사 임직원 등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정작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함바 비리가 이렇듯 사법비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재개발 사업의 부패와 비리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1966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은 줄곧 말쟁을 일으켰다. 원주민은 강제로 쫓겨나고, 철거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부패는

당연시 됐으며 도시는 아파트 공간으로만 확일 해왔다.

정부도 지난 2019년 2월 뒤늦게 부작용을 인지하고,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말뿐이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재개발 복닥전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아파트 가격 이상 급등, 공공기관의 제 역할 방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 투기 만연, 양극화와 빈부 격차 등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